

어린이집·유치원 하나로... '유아학교' 본격화

하나로 '유보통합'...정부, 2025년 본격 시작 만 0~5세 교육·보육...교육청이 전담 관리키로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법정부 전담 심의·지원 조직을 통해 관리체계 통합과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 2025년부터 교육청이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맡아 관리한다.

사립과 국·공립, 기관 간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벌어져 있는 만 3~5세 학부모 부담금 격차는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올해 6월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선도 교육청을 지정, 3~4개 광역 시도에서 지원금, 돌봄, 안전, 학부모 부담금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법정부유 보통합 전담 심의·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통합 방안을 수립,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

에서 맡아 관리하며 서비스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만 3~5세 교육은 교육시설인 유치원이, 만 0~5세 보육은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이 각자 맡아 왔다. 관리 주체 역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로 각자 다르다.

지난해 4월 학부모 교육·보육비 부담액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1인당 매달 13만5000원을 부담하며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무상에 가깝다. 특별활동비를 포함할 경우 사립유치원은 19만8000원이다.

또한 급식비는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1인당 2800~3435원의 단가로 지원해 전국에서 사실상 무상급식을 하는 중이지만, 어린이집은 1인당 2500원을 보조해 학부모가

일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영·유아가 어느 곳에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교육·보육의 질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결국 30여 년 전인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처음으로 '5·31 교육개혁'을 꺼내들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역대 정부마다 유보통합을 시도했으나 매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정부는 2024년부터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줄인다.

교육·보육비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학부모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지난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도 2024년 현실화한다. /뉴스

광주시의회, 첫 임시회 개최 실·국 업무보고·안전 처리 등

광주시의회가 30일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식을 갖고 2월6일까지 8일 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4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3건, 건의안 1건, 보고안 3건 등 모두 5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법 조례안은 행정자치위는 '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 환경복지위는 '광주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산업건설위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 교육문화위는 '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활성화 조례안' 등 17건이다.

아울러 '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4건, '204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안 등 3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등 3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정무창 의장은 "올해를 시경(詩經) 소아편에 나오는 '유유낙명'의 해로 정해 더불어 잘 살자는 협업 정신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상생과 협치의 기조로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사독재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명, 검찰 추가소환에 "모욕적·부당해도 가겠다"

檢 대장동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며 "결국 제가 부족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제가 승자에게 발길질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나.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은 기소된다. '답정답'을 정해두고 기소' 아닌 기소하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것이고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기소할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그 합리적인 설명을 깨기 위한 조사를 한다"고 덧붙였다.

2차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 자체가 모욕을 주기 위한,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 행위"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8일 조사에서 매듭지을 수 있었던 일을 굳이 시간을 끌어 재소환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보도한 내용을 보니 준비한 질문지가 100쪽이었다. 저는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의했기 때

문에 진술서로 답을 감응한다고 했다"며 "질문에 대한 답을 더하면 아무리 많아도 120~130페이지를 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업의 정당성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산 엘시티 사업은) 개발이익 100%를 민간이 차지했다. 약 1조원 정도 된다고 한다"며 "대장동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막아 사업 당시 예정 이익 6200억원 중에 4700억원을 환수했고 사업자에게 1800억원이 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후 저희가 (민간에) 추가 부담을 1120억원 더 시켜 우리 몫이 5503억원이 됐고, 민간업자 예정 수익은 1800억원 정도여서 70% 넘게 공적으로 환수한 것"이라며 "검찰은 왜 그것밖에 환수를 못 했다. 땅값 오를 것 왜 예상 못 했다. 업자들이 이익을 도모한 것 아니냐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한다. 그러면 엘시티는 무슨 죄가 되나.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스

민주당 광주시당, 권리당원 당비·주소지 등 정비 착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조직 강화 차원에서 권리당원 정비에 나섰다.

광주시당 소속 39만 당원 가운데 권리당원 6만 명이 대상이며, 약정당비를 최소 3개월 이상 미납했거나 다수의 당원이 특정주소지로 등재된 경우,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권리당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당원 정비는 8개 지역위원회별로 직접 연락을 통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당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되는 민생 파탄과 검찰독재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당원 정비를 통해 당세와 당원 결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시당 관계자는 "당원 정비는 통상 2~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당원 결집도가 높아지고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당원은 2016년 24만 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말 기준 15만 명이 증가한 39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전남 지방의원 의회비 6600만원...증액 필요하나?

올해 대다수 의회 의정비 인상·반대 여론 비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이 2022년 분예산 기준 전남지역 지방의회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의회 관련 예산은 총예산의 0.13%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0.22%보다 0.09%포인트가 낮다.

지방의회 예산은 의원들의 수당, 정책연구, 여비 등이 포함된 의회비와 의회사무처 경비로 나뉜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경비를 제외한 의회비는 203억7000만원이며, 의원 61명으로 나누면 의원당 의회비는 8088만원 수준이다.

전남지역 시·군 의회 의원당 의회비는 시 지역이 평균 5793만원, 군 지역이 평균 6575만원이다.

전남지역 광역·기초의회 인당 의회비는 평균 6613만원이다.

기초의회 인당 의회비는 신안군의회가 7633만원으로 가장 높고, 여수시의회가 5559만원으로 가장 적다. 의원당 의회비가 7000만원 이상인

곳은 신안, 보성, 화순, 영광이고 의회비가 6000만원 이하인 곳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곡성, 고흥, 함평이다.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은 "광역·기초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비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국내외 연수·시찰 등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지만, 정책연구·개발 등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 29곳 중 23곳이 의원들의 의정비를 인상한 상황이라서 의회비 증액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의겸 고발...악의적 가짜뉴스로 명예 훼손" 대통령실 "아무 의혹 제기 후 아닌 것 증명하라 요구"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우리기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오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의겸 대변인인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자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융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

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 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도 내역은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아무 의혹이나 제기 후 피해자에게 추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목과귀가 어 렷다"고 고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조속히 마련해야" 명진 광주시의원 1차 본회의서 '특구 추진 시민 동참' 제안

광주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도심융합특구사업이 관련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중단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은 30일 제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5월 발의된 이후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정지돼 있다"며 "특구 추진을 위해 광주시민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도심융합특구는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추진된 사업으로 비수도권의 청년인재 유출을 막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도심에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산단처럼 도시 외곽에 대규모

모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 중 투 자해 일터와 삶터, 배움터, 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만들어 지역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지는 상무지구 일원 85만㎡ 규모로 행정·교육·금융·의료·지하철·KTX 등 생활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으로, 광주 지역에 이미 지정돼 있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산단, 대학 등 다양한 자원과 물리적·기능적 연계성을 통해 지역성장의 원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도기 기자



광주 북구, 감사서 개발행위 부당 허가 적발 시 감사위, 개발제한구역 형질 변경 3건 위법 판단

광주 북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형질 변경 관련 부당한 허가 행위를 한 것으로 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으나, 북구는 '적법 행정이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3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법인 종합감사에서 북구청의 그린벨트 개발 행위 허가가 일부 부당했다고 보고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

역법에 따라 그린벨트 내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는 예외적으로만 허가될 수 있다.

시 감사위는 북구청이 그린벨트 내 형질 변경 3건(철도·옹벽쌓기 등)에 대한 허가 행위가 관련 법령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공원 녹지과에 제지 중이던 공무원 5명 중 2명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명은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북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거쳤고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김도기 기자

호매민평

이태헌

마스크해제 그후

다들편협관 MASK 마스크

아시원해

태헌

화장대 앞에서 시간투하!!